「국민이 편안한, 보다 나은 국세행정」 구현을 위한

2022년 국세행정 운영방안

2022. 1. 26.

국세청

목 차

Ⅰ.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 ····· 1

Ⅱ. 2022년 세정 여건 및 방향 ····· 3

Ⅲ. 2022년 핵심 추진과제 ····· 6

1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**서비스세정** 고도화 ····· 6

2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**급부세정** 강화 ····· 9

3 **공정세정**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 ····· 12

4 일하기 좋은, **활력 있는 일터** 조성 ····· 14

Ⅳ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···· 16

I. 지난해 주요 추진성과

1 [성실신고 지원] 성실납세 지원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

○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대내외 **경제 여건**의 **불안**에도 성실납세 지원과 납세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관 **세입예산 조달**에 최선의 노력 경주

'20년 실적	'21년 예산	11월 누계 세수		
		'20년	'21년	증감
277.3조	**304.6조**	260.4조	**314.7조**	**54.3조** (20.9%↑)

○ 모바일 서비스 확대, 맞춤형 내비게이션, 대화형 신고 등 **홈택스 2.0**의 본격 **추진**과 수어(手語) 상담영상·챗봇 서비스 등 **디지털 중심**의 **납세서비스 고도화**

○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신고 지원을 위한 **맞춤형 안내자료**를 제공하고, SNS마켓·유튜버 등 **신종업종 사업자**를 위한 **세정지원센터*** 운영

* 본·지방청, 세무서 전담팀을 통해 세무상담, 사업자등록·신고 안내 등 성실신고 지원

2 [코로나19 대응]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

○ 본·지방청 및 전국 세무서에 구성된 코로나19 **전담대응반**을 중심으로 주요 세목의 신고·납부기한 연장, 환급금 조기지급 등 전방위적 **세정지원** 실시

▸ **(납부기한 연장 등) 최대 9개월**까지 **납부기한 등 연장**, **최장 1년**까지 **압류·매각 유예**
*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: 1,389만 건, 33.5조 원 상당

▸ **(환급금 조기지급)** 부가세·연말정산 등 **환급금** 최대한 **조기 지급**, 부가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

▸ **(직권 신고·납부 연장)** 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**신고·납부기한 직권 연장**
* (부가) '20.2기 신고·납부(1개월)·'21.1기 납부(2개월) 연장, (소득·법인) 납부기한(3개월) 연장

○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'20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(14천여 건)하고, 자영업자·소상공인에 대한 **세무검증 배제조치***를 '21년말까지 **연장** 시행

* (지원내용) 정기조사 선정 제외, 조사유예,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/ (기간) '18.8월~'21.12월

○ **실시간 소득파악 제도**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**전담조직*** **설치** 및 **철저한 사전준비****를 통해 범정부적 **복지제도 추진**을 **적극 지원**

*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('21.3월) 이후 지방청·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 설치
** 대리인·사업자 대상 간담회 실시,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개발·배포 등

3 [경제활력 제고] 우리 경제의 혁신과 성장을 세정측면에서 뒷받침

○ **한국판 뉴딜기업·혁신성장 기업**에 대해 세무조사 제외·유예, R&D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,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등을 활용한 **총력 세정지원**

- 전국 세무서에 **혁신성장 전담창구**와 **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**를 운영하고, 뉴딜기업 전용 온라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하여 **현장지원** 강화

○ **일자리 창출 중소기업**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등 **세정지원 요건**을 한시적으로 **완화***하는 한편, 납기연장·납세담보 면제 등 지원 계속

*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경우 : (기존) 4% 이상 고용증가 → (완화) 3% 이상

4 [권익 보호]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○ 세무조사 범위 확대 승인 시 납세자의 **의견**을 **청취**하도록 개선하고, **스마트 모니터링***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세무조사 **감독 기능** 강화

* 조사과정의 적법절차 준수여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, 사후에 조사 만족도 평가 실시

○ 권리보호요청 등 주요 민원 진행상황에 대한 **실시간 알림서비스**를 **제공**하고, 각종 권익 보호 기능을 통합한 전담 누리집 **'납세자권익24' 신설**

5 [탈세 대응] 탈세·체납에 엄정 대응으로 과세형평성 제고

○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**불공정 탈세** 및 **민생침해 탈세, 부동산 탈세, 역외탈세 행위 근절**에 조사역량 집중

▸ **주요 조사사례** 연소자의 고가·다주택 취득 등 변칙적 **부동산 탈세**, **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** 반칙·특권 **불공정 탈세**, 반사회적 **민생침해 탈세** 등

- 특히, 국토부 **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**과 **협업***, **부동산거래탈루대응TF****를 설치, **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** 운영 등 부동산 탈세에 엄정 대응

* (직원 파견) 부동산 실거래 조사 협업 및 조사결과 탈세의심자료 통수보

** (각 지방청 운영) 시장동향 모니터링, 구체적 탈루혐의 및 신종 탈루유형 정보 수집

○ 명단공개, 출국금지 등 **징수 인프라**와 **빅데이터 분석기법**을 활용하고, 고액체납자의 **가상자산**을 **강제징수**하는 등 **악의적 체납자**에 강력대응

Ⅱ. 2022년 세정 여건 및 방향

1 세정 여건

1 [경제상황]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나 대내외 리스크로 하방 위험 존재

○ **(경기)** '21년도 수출과 설비투자 중심의 성장에 이어, '22년은 서비스업 등 **내수 부분**이 **본격적**으로 **회복**됨에 따라 **성장세**가 **지속**될 것으로 전망

* '22년 경제성장률 전망(실질, %) : (IMF) 3.3, (OECD) 3.0, (한국은행) 3.0, (KDI) 3.0

- 다만, 오미크론 변이 확산, 원자재수급 불균형과 물류 차질 장기화,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등 **대내외 리스크**에 따른 **경기 하방 요인** 상존

○ **(민생)** 금리인상에 따라 **자영업자·소상공인**의 **채무부담**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으며, 고용 측면에서 저숙련 근로자의 **어려움***이 **지속**될 우려

* (KDI, '21.11월) "코로나19 위기에서 차별적인 고용 충격이 경기 회복기에도 지속"

○ **(구조)** **디지털화·탄소중립** 등 미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추진되면서 **경제·산업·고용** 등 측면에서 **급격한 구조 변화**의 흐름이 발생

2 [국민요구] 행정서비스 수준에 대한 기대가 크고, 공정성에 대한 민감도 증가

○ **(서비스)** 민간 부문의 서비스 수준 향상에 맞추어 세정 측면에서도 **권익 보호**는 물론 **디지털 접근성** 확대, **맞춤 서비스** 제공 등 국민의 요구 다양화

- 국세행정 집행과정에 있어 국민과의 진정한 **소통**과 실질적 **국민 참여**를 통해 **국민 공감대**를 **확보**하는 것이 정책 효과성 확보에 중요

○ **(공정성)** **공정 사회**에 대한 요구가 **확산**됨에 따라, **자발적 성실납세**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**공정**한 **세정** 구현을 통한 **국민 신뢰 확보**가 관건

- **성실납세**에 대해서는 **우대·지원**하고, **경제적 어려움**이 큰 납세자는 조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**세정지원** 방안을 마련하여 제공

- 국가적 위기극복 과정에서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**편법적 부의 이전**과 **악의적 세금 탈루행위** 등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히 대응할 필요

3 소관 세입예산

○ 국세청의 **소관 세입예산**은 총 **333.2조 원**으로 '21년(추경예산 304.6조) 대비 **+28.6조 원 증액 편성**(+9.4%)

2022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

(단위: 원, %)

구분	'22년 예산	'21년 예산	'21년 예산 대비	
			증감액	증감률
국세청 소관	**333.2 조**	304.6 조	+28.6 조	+9.4
총국세	343.4 조	314.3 조	+29.1 조	+9.3

* '22년 총국세 예산(343.4조) = 국세청 소관(333.2조) + 관세(8.7조) + 他기관 농특세(1.4조)

- '21년 대비 **큰 폭**으로 **증액 편성(+28.6조 원)**되었으나, 경제상황에 따른 세수의 **상방·하방*** **요인 혼재**로 **불확실성**이 큰 상황

* (상방 요인) 경제성장률 상향 전망, 법인 영업이익 개선 등
(하방 요인) 물가상승·유동성 위축에 따른 경기회복 둔화 우려, 자산시장 호조 약화 등

○ **전략적**이고 **세심한 국세행정 운영**을 통해 경제정상화를 위한 **확장적 국가재정 수요**를 안정적으로 **뒷받침**할 필요

2 세정운영 방향

1 **[서비스세정]** 신고 지원 확대,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 구축으로 보다 **수준 높은 납세서비스**를 제공하고, 국민 참여·소통 확대를 통한 **체감형 혁신성과** 창출

2 **[급부세정]** **국민경제**의 완전한 **정상화**를 세정차원에서 적극 **지원**하고, 장려금 지급 확대, 소득-복지 연계 제도의 안착으로 실질적 **복지세정** 제공

3 **[공정세정]** **국민경제**의 균등한 **회복**을 저해하는 **불공정 탈세** 등에 **조사 역량**을 **집중**하고, 적극적인 **체납·송무 대응**으로 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

4 **[조직활력]**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**업무 방식**과 **환경**을 **혁신**하고, 현장 중심의 **소통**과 **청렴 활동**을 통해 **건강한 조직문화** 확립

『국민이 편안한, 보다 나은 국세행정』

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

대국민 급부세정 강화

고의적 탈세·체납 엄단

활력 있는 일터 조성



디지털 기반의 재설계를 통해 **납세서비스를 고도화**하고
복지세정 기관으로서 본격적으로 **자리매김**하는 한편
공평한 세(稅)부담 실현으로 국세행정에 대한 **국민신뢰** 공고화

· 추진과제 ·

Ⅰ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

- ✓ 재설계를 통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
- ✓ 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참여와 소통 확대

Ⅱ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

- ✓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뒷받침
- ✓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

Ⅲ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

- ✓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평한 세부담 실현
- ✓ 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납·송무 대응

Ⅳ 일하기 좋은 활력 있는 일터 조성

- ✓ 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 · 환경 혁신
- ✓ 현장 중심 소통, 청렴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

Ⅲ. 2022년 핵심 추진과제

1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

◈ 성실신고 지원 확대, 디지털 기반 납세 환경 구축으로 보다 수준 높은 **납세서비스**를 제공하고, **참여**와 **소통 확대**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**혁신성과 창출**

1. 재설계를 통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

1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 확대

○ **(신고지원)** 미리·모두채움 확대, 관련 정보 통합조회 등 **신고편의**를 **향상**시키고,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**세제혜택**까지 **포함**하는 **신고 도움자료** 제공

- 신종업종 사업자, 공익법인·기부금단체, 종교인, 재산제세 납세자* 등 **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**에게는 보다 세심한 **맞춤형 안내** 제공

  * 특히,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종합안내(상속세 신고, 한정승인 등)로 불합리한 빚의 대물림 방지

- **간소화자료 일괄제공** 서비스 및 자료 확대제공 등 연말정산 고도화로 근로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, **전자점자문서 제공**으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

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주요 납세서비스 개선사항

구 분	내 용
일반	▸ 미리채움·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* [미리채움] 결제대행자료(오픈마켓 판매자료) 추가, [모두채움] 비사업소득으로 확대 ▸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 확대 * 사업연도 환산오류, 공제·감면, 이월결손금 공제 부적정 등 ▸ 전자(세금)계산서 등 개별 정보를 통합한 부가가치세 통합조회 서비스 도입
신종업종	▸ 빅데이터 분석, 외환자료 수집 등을 통해 신종업종 사업자 대상 성실신고 안내 * 1인 미디어 창작자의 광고·후원금, 전문 중고품 판매사업자(리셀러) 수입 등 ▸ 원천징수 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공제제도 사전 안내
공익법인/기부금단체	▸ 공익법인 신고 내비게이션 도입 추진, 오류예방기능 강화* * 미리채움 항목 확대(주식·부동산 보유현황, 이사구성원 등), 주요 공시항목 작성사례 제공 ▸ 기부금단체 「지정추천 셀프 체크리스트」, 지정추천 단계별 알림서비스 제공 * 필수서류 제출·정관 요건 충족·홈페이지 개설 여부, 지정취소 이력 등
종교인	▸ 신고유형*·수입금액 구간별 모의 세액계산을 통해 세액비교 자료 안내 * 종교인소득(기타소득)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 가능 (공제 가능 내역 등 차이)
재산제세	▸ 미성년 상속인에 대한 상속제도 안내 (안내문 개선, 상속세 신고·결정 전 추가 안내) ▸ 현금 증여세 신고 원클릭 서비스 제공 ▸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 상시조회 서비스 제공
근로자	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, 간소화자료 확대*, 전자점자문서 제공 * 폐업 노인장기요양기관 의료비, 신용카드로 결제한 월세액 등 ▸ 간소화자료 조회 시 부양가족의 당해 연도 소득금액 기준 초과 여부 사전 안내

○ **(세무안내)** 세무상담포털 운영, '22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책자, 포스터, 상담 영상 제작 등* 납세자에게 **유용한 세무정보**를 다양한 형태로 **안내**

* 생활세금시리즈, 「주택과 세금」, 「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맵」, 「사례로 풀어보는 주택세금」

- 세무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**일부 납세자**에 대해서는 **현장설명회**와 **비대면 상담** 등 별도 채널을 통해 세무정보 및 상담 제공

▸ **(현장 상담)** 고령자, 외국인, 농어민 대상의 현장방문 세무설명회 개최 확대
▸ **(수어 상담)**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한 유튜브 수어(手語) 상담영상 확대 제작
▸ **(비대면 상담)** 영세납세자에게 나눔 세무사·회계사의 세무멘토링을 온라인 Q&A 방식으로 제공

2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개인 맞춤형 납세 환경 구축

○ **(홈택스)** 영세납세자 신고지원에 효과가 입증된 **편의기능**을 더욱 확대하고, **지능형 서비스**로의 발전적 진화를 추진하는 등 **「홈택스 2.0」 고도화**

- 납세자가 신고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'**내비게이션 서비스**'를 신청·자료제출 분야까지 **확대**하고, 음성안내 서비스를 추가

- AI,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신고·납부 全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'**AI 세금비서**(가칭)'를 일부 세목에 **시범 도입** 및 단계적 **추진계획*** 마련

* 국내·외 사례, 구현 방안 등에 대한 정책연구 등을 통해 확대 방안 마련

○ **(모바일)** 납세자 접근성이 우수한 **모바일 중심**으로 홈택스 서비스(손택스)를 지속 **확장**하고, 온라인을 통한 세무서 방문 예약 등 **O2O 서비스*** 제공

* O2O[On(Off)line to Off(On)line], 온라인과 오프라인 영역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서비스

- 별도 프로그램(App) 설치 없이 편하게 이용 가능한 **손택스 웹서비스** 개시

- 사업자등록·사실증명 발급 등 민원 접수·처리 진행상황, 환급금 통지서 반송 사실, 고지서 발송 등을 **모바일**로 납세자에게 **실시간 안내**

- 대기 번호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세무서 민원실 **방문 예약 서비스** 도입

3 더욱 두터운 납세자 권익보호 체계 마련

○ **(감독·견제) 납세자보호위원회**의 **권한**과 **책임**을 **강화**하고, 지방청·세무서 **납세자보호담당관**의 세무조사에 대한 **감독·견제 기능** 제고

- 제도·절차 개선 등에 대한 본청 위원회 **안건상정 권한**을 지방청 위원회 위원장으로 **확대***하고, 납세자보호위원이 준수해야 할 **행동강령 제정**

* 본청 위원회 안건상정 권한 : (현행) 본청 위원장 → (개선) 지방청 위원장으로 확대

- 납세자보호담당관의 **세무조사 입회 기준**을 수입금액(기존 수입금액·자산총액·자본금 등)으로 **단순화**하고, **기준금액**을 **완화***하여 제도의 **활성화** 추진

  * (현행) 개인 업종별 1.5~6억 원·법인 3억 원 미만 → (개선) 개인 10억 원·법인 20억 원 미만

○ **(과세자문)** 법원의 최신판결 등을 반영하도록 과세기준(법률)자문을 **소송관리 부서**에서 **통합 운영**하고, **과세사실판단자문**의 **실효성*** 강화

  * 자문에서 지적된 과세증빙 부족이 보완되지 않은 경우 과세품질 평가 시 면책 제외

○ **(권리구제)** 경미하거나 선례가 있는 불복 사건, 청구세액 1백만 원 미만 **소액 고충민원***은 **처리기간**을 **단축**하여 영세납세자의 세금고충을 신속 해결

  * (현행) 14일 내 처리 → (개선) 10일 내 처리

2. 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참여와 소통 확대

1 납세자와의 다각적인 소통채널 마련

○ **(세정현장)** 다양한 납세자가 참여할 수 있는 **현장 중심**의 **소통채널**을 **마련**하여 여론 및 경제동향 파악, 세정 홍보, 민간 의견 수렴 등 추진

- '**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**'도 새롭게 실시하여 납세자와 관련된 최신 세법해석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에 활용

○ **(온라인) 주요 민원 사례** 등을 빅데이터 방식으로 **분석**하여 **납세자 관심사항**과 **민원 동향**을 파악하고 **개선과제 발굴**에 활용

- 국세행정 혁신 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「**국민정책참여단***(2기)」을 지속 운영하고, **혁신 성과** 등을 **참여 국민**에게 정기적으로 **피드백**

  * 국세행정 전 분야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·반영하기 위해 '21년 신설한 국민참여 기구

2 청년 관점을 적극 반영하는 세정 운영

○ **(참여확대)** 청년의 **국세행정** 전반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국 세무서의 납세자보호위원회* 등 **각종 위원회**에 **청년위원 위촉** 추진

  * 세무·회계·법률분야 전공 또는 자격자로서 만34세 이하의 청년 최소 1인 위촉

○ **(청년지원)**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**경제주체**로서의 **성장**을 **뒷받침**하기 위해 학자금 상환, 창업·고용 분야에서 세정 측면의 지원 확대

▸ (**ICL 지원**)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연체금 한도 인하, 연체가산금 부과 방식 개선(월→일 단위)
▸ (**창업지원**) 창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청년창업자를 위한 맞춤형 세금교육·정보 등 제공
▸ (**취업지원**) 청년 고용시 가중치 부여 등 청년 고용계획 기업에 대한 조사선정 제외 우대

2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

◈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**세정 차원**에서 적극 **지원**하고, **장려금** 지급 **확대**와 **소득-복지 연계 제도**의 안정적 정착으로 실질적 **복지세정 제공**

1.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뒷받침

1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지속적 세정노력 전개

○ **(유동성지원)** 단계적 일상회복 속에서도 피해 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**영세 자영업자, 소상공인** 등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**세정지원** 제공

- 일정 규모 이하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, 손실보상 非대상 업종,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해 **부가가치세·종합소득세** 등 **납부기한 연장*** 추진

* [부가] 1월 확정신고('22.1월→3월) [소득] 손실보상 非대상업종 중간예납('22. 2월→5월)

- **미수령 국세환급금**을 **다양한 매체**(우편·모바일 등)를 통해 적극 **안내**하고, **환급계좌** 신고 **오류**를 실시간 **검증***해 미수령 환급금 발생 **사전 차단**

* (현행) 계좌개설신고에 한해 제공 → (개선) 각종 세금 신고시 기재하는 환급계좌로 확대

- 세무서 「**세정지원추진단**」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지역 납세자에 필요한 **맞춤형 세정지원** 방안을 적시에 마련·집행

○ **(제도개선)** 부가가치세 **예정고지 제외** 및 소득세 **중간예납 소액부징수**의 **기준금액 상향***으로 자영업자의 세금 납부부담 완화

* (현행) 30만 원 미만 → (개정) 50만 원 미만 ('22.4월 예정고지, '22.11월 중간예납부터 시행)

2 경제 역동성 강화를 위한 세정제도 운영

○ **(성장지원)** 일자리창출·혁신성장 기업 등에 대한 **세정지원 체계**를 **개선**하고 내실있는 지원을 통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

- 일자리창출·혁신성장·뉴딜 등 기업 유형별로 상이했던 세정지원* 내용을 **모든 유형**에 동일하게 **확대 적용**하고, 지원대상 기업 **최신화****

* [유동성지원] 납부기한 연장, 납세담보 면제, 압류·매각 유예, 환급금 조기 지급 등
[경영지원] R&D세액공제 우선심사,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대상 선정 우대(혁신성장·뉴딜기업 대상)

** 「한국판뉴딜 2.0」 관련 기업 등 추가, 지원 타당성이 낮은 기업 정비 등

- R&D 사전심사 신청 **제출서류**를 **간소화**하고 중소기업 세무컨설팅 제도 **신청기준**을 **완화**하여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세정지원 제도 활용을 유도

○ **(세무부담 완화)** ‘자영업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’를 코로나19 **피해 납세자 중심**의 실질적 **검증부담 완화** 조치로 **재설계**

- **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대상** 사업자 등 지원 필요성이 높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조사유예 등 실효성 있는 **지원 조치** 강구

  * 정기조사대상 선정의 경우 영세 자영업자, 매출 급감 차상위 사업자는 원칙적 제외 계속

- **간편조사** 선정요건을 **완화**하고 내실있는 **세무 컨설팅**을 실시하는 등 중소납세자의 **조사부담**을 지속적으로 **축소**

○ **(디지털세 대응)** 디지털 경제의 심화에 따라 과세권 재배분 등 **국제사회 논의**가 진전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**대응** 필요

- **(집행기반)** ’23년 시행*을 목표로 진행 중인 **OECD 논의**에 적극 **참여**하고, 적용기업에 대한 **신고안내·검증** 등을 수행하기 위한 **기반** 마련

  * ’22년 중 다자협정 체결·비준 및 개정입법 예정

- **(정보교환)** 디지털세 **신고서** 및 **증빙자료, 분쟁대응*** 절차 관련 **서류** 등을 국가 간 원활하게 **교환**하고, **정보**를 **공유**할 수 있도록 준비

  * 국가 간 과세권의 재배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국가 간 이견 다수 발생 예상

2.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

1 근로·자녀장려금을 통한 일하는 복지 지원

○ **(신청안내)** 지급대상 확대*에 따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**빠짐없는 안내**로 500만 이상 대상 가구에 차질 없이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

  * ’22.3월 신청부터 가구 유형별 총소득기준금액 200만 원 상향 (예: 단독가구 2,000만 원→2,200만 원)

- 전년도 심사과정에서 추가 수집한 분양권 가액, 전세금 등 자료를 활용하여 장려금 **신청 안내대상** 선정의 **정확도** 제고

- 장려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모바일 안내문 발송, 국민비서* 알림서비스 제공, 미신청자에 대한 추가 서면안내 등 촘촘한 **안내 체계** 구축

  * 행정안전부 주관 대국민서비스로 여러 분야의 알림을 네이버, 카카오 등 플랫폼앱을 통해 제공

- 장려금 대상자가 **다수 근무**하는 **기업**에 대한 안내 **기준*** 및 **방법**** 개선

  * (현행) 장려금 대상자 500명 이상 근무 기업 → (개선) 10명 이상 근무 기업

  ** (현행) 이메일·공문 → (개선) 홈택스를 활용한 ‘나의 세무알리미’ 및 ‘쪽지보내기’

○ **(편의향상)** 장려금 신청자가 오류 없이 더욱 편하고 빠르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**'신청-지급-정산'** 프로세스 상의 **시스템**을 대폭 **개선**

- 홈(손)택스의 장려금 신청과 **종합소득세 신고**를 **연계**하고, 장려금 수령 **계좌 입력 오류** 여부를 **실시간 검증**하여 신청자의 수급 편의 제고

- 하반기분 지급과 연간소득 정산 **절차**를 **통합***하여 하반기분 **환수**를 원천 **차단**하고, **정산분** 지급금액은 **두 달** 이상 앞당겨 **조기 지급**

* (현행) 하반기분 지급(6월), 연간소득 정산(9월) → (개선) 하반기분 지급 및 연간소득 정산 통합(6월)

2 국민복지·정책개발 등 영역에서 국세정보의 활용도 제고

○ **(정보제공)** 코로나19 피해 극복 등 공익목적의 과세정보 제공 요청에 대해서는 **적법**한 **범위 내**에서 **신속 제공**하여 지원 효과를 극대화

-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'데이터 개방 및 디지털 전환' 정책에 맞추어 국세데이터와 **이종데이터**의 **결합*** 등 **고부가가치 창출 방안** 적극 **모색**

* 결합전문기관 지정 추진, 고용·복지 등 다양한 데이터 결합을 통해 연구·정책수립 등 지원

○ **(정보보호)** 과세정보 제공 **단계별**(요구-활용-폐기) **관리체계** 마련 및 과세정보이용기관에 대한 **보안실태 현장점검**으로 개별납세자 정보보호 강화

3 복지세정 추진기반으로서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안착

○ **(대상확대)** 대리기사·캐디 등 **용역제공자**에 관한 **과세자료 매월제출**이 '21.12월부터 본격 **시행**됨에 따라 세심하고 철저한 관련업무* 수행

* 플랫폼사업자 중점관리 시행, 집행 가이드라인 마련, 지방청과 플랫폼업체 소통체계 구축 등

- 업종별 심층분석을 통한 미제출 유형 발굴,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업을 통한 미제출자 파악 등 실시간 **소득파악**의 **사각지대 해소** 병행

○ **(부담경감)** 소득자료 제출 도움창구 운영, 홈(손)택스 제출시스템 개선, 용역제공자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등 **제출부담 경감방안**을 적극 마련

-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의 **소득자료 제출서식**을 **통합**하는 등 소득자료의 이중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○ **(복지연계)** 다양한 복지 영역에서 실시간 소득자료를 적절·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**「소득자료관리시스템」**을 **구축**하고 업무프로세스 마련

- '22.9월까지 **모바일 서비스**와 **분석기능**을 **강화**한 **별도**의 **전산시스템**을 마련하여 소득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행정에서의 활용도 제고

3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

◈ **국민경제**의 균등한 **회복**과 **공평한 세부담** 실현을 **저해**하는 **불공정 탈세** 등에 **조사역량**을 **집중**하고, 적극적인 **체납·송무 대응**으로 정당한 **과세처분**의 **실효성 확보**

1. 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평한 세부담 실현

1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엄단

○ **(사익편취)** 기업자금 불법유출,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 등 사주일가 및 관련기업의 **반사회적 불공정 탈세 행위***에 엄정 대응

* 특수관계자 간 불공정 거래, 법인명의 사치성 재산 취득·사적사용 등

- 고소득 사업자 등의 가공경비, 이면계약 등을 통한 **고질적 탈세** 검증도 강화

○ **(국부유출)** 조세회피처의 **서류상 회사**를 이용한 우회 거래, **비밀계좌**를 이용한 해외 은닉재산의 국외 증여 등 **지능적 역외탈세** 엄단

- **글로벌 기업**의 우월적 지위와 조약·세법의 허점을 악용한 국내 소득·자본의 부당 유출 등 **공격적 조세회피***에 체계적 검증을 통해 강력 **대처**

*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, 거래구조 변경, 무형자산 이전, 부당 자본거래 등

2 생활밀접·거래질서 문란분야 대응 강화

○ **(생활밀접)** 위기상황을 악용하여 폭리를 취하는 생필품 취급업체, 불법 대부업 등 **국민생활 밀접분야**의 탈세행위 **검증** 강화

- **온라인 플랫폼** 등을 통한 **신종·변칙 탈세**행위에 대한 **모니터링** 확대

○ **(거래질서)** 매점매석 등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원·부자재 **유통 문란 행위** 및 **거짓세금계산서 수수** 취약 업종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강화

3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검증 강화

○ **(자금출처)** 자금여력이 부족한 **연소자**의 **주택 취득**과 소득 대비 **고액자산 취득자**의 자력 취득 여부를 **수시 분석**하고, **검증대상 확대***

* (현행) 주택, 상가·빌딩 등 고가재산 취득자 → (확대) 고액 채무 상환자

○ **(비과세 검증)** **외국인** 등 **비거주자**,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에 대한 거주요건을 미충족한 자 등의 양도소득세 **비과세신고** 적정여부 **점검**

4 효과적 탈세 대응을 위한 조사인프라 고도화

○ **(정보수집·분석)** 유관기관 협업, 국가간 정보교환을 통해 신종탈루유형 등에 대한 **탈세정보 수집**을 **강화**하고, 국민참여 **탈세제보**를 **활성화**

- 정보분석 및 시각화 툴* 고도화, 온라인 플랫폼 신종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, 가상자산 추적기술 확보 추진 등 **탈세정보**의 **분석·추적 기능** 강화

* 국제거래를 통한 부당이익 제공 분석 툴, 계열기업 지배구조 시각화 시스템 등

○ **(과세근거 확보)** 최신 **디지털환경**(클라우드, 가상 업무공간 등)에 대응할 수 있는 **표준적 포렌식 조사체계**를 마련*하여 과세근거를 과학적으로 확보

* 데이터 탐지·접근·확보를 위한 절차, 대용량 데이터의 분석·검증기법, 현장대응 노하우 등 제공

2. 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납·송무 대응

1 악의적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 강화

○ **(현장추적)** 변칙적 재산은닉*에 대한 **기획분석**을 **강화**하고, 명단 공개자에 대한 **금융분석·합동수색**을 실시하는 **특별정리기간** 운영

* 특수관계자를 이용한 허위 근저당권 설정, 집합투자증권·가상자산을 이용한 재산 은닉 등

○ **(체계정비)** **현장중심**의 **재산추적**을 위해 지방청·세무서의 **기능 재정비**

- **지방청**에 체납추적 분석을 전담하는 **관리팀**을 운영하고, 지방청 체납추적과 수준의 **현장 전담반**을 세무서 체납징세과에 **시범 도입**

2 고액·중요소송에 대한 맞춤형 대응체계 구축

○ **(고난도)** 역외탈세·조세전략(Tax Planning) 활용 사건 및 선례 없는 복잡한 사건의 승소 사례를 분석하여 **소송 유형별 대응방안** 제공

- **장기계류 사건**은 학계·판결 동향의 **주기적 분석** 등을 통해 **적극 변론**

○ **(유사쟁점)** 모든 사건을 450여개 **쟁점코드**로 **분류**해 유사사건과 비교할 수 있는 **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***을 마련하는 등 송무역량 강화

* 유사쟁점사건 수행 시 일관된 논리로 대응할 수 있도록 쟁점별 표준서면 제공

4 일하기 좋은, 활력 있는 일터 조성

◈ 직원들이 납세서비스 제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**업무 방식**과 **환경**을 **혁신**하고, 현장중심 **소통 활성화** 및 **청렴역량 강화**를 통해 **건강한 조직문화** 확립

1. 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·환경 혁신

1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수동·반복 업무 자동화

○ **(자동화)**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업무에 접목하여 전산 기반의 **자동 심사 분석 기능***을 **개발·고도화**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 지원

* 장려금 자동심사 대상 확대, 과세 관련 자료·신고서 전산 분석 정교화 등

○ **(전산화)** 통지서 송달관리*, 우편물 자동발송, 납세자 안내사항 이력관리 등 **단순 관리 업무**는 **전산화**하여 업무 과정의 비효율적 요소 제거

* 송달결과(송달완료, 지연 등)를 우체국과 연계하여 내부 전산망에 자동 수록

2 구성원의 성장을 지향하는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

○ **(성과기반)** 개인별 성과평가가 구성원의 동기 유발과 조직의 생산성 향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**평가지표**를 **개선**하고 **인사 운영**에 **반영** 내실화

- **적극행정 수행, 납세자 권익보호** 등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성과 사례를 창출한 직원들에게 표창·성과평가 가점 등 **확실한 우대** 제공

○ **(다양성)** 하위 직급의 공채직원, 여성에 대한 본·지방청 근무기회와 특별승진 확대 등 **우수 인력**이 **성장**할 수 있는 **제도적 기반** 마련

3 실무역량 강화를 돕는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

○ **(교육개편)** 신규자가 업무현장에 투입되는 즉시 자신감 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**이론·실무병행 강의** 및 **참여·체험형 교육*** 도입

* 세목별 신고서 작성 등 현장실무, 모의세무서를 통한 민원응대 등

- 재직자는 현업에서 요구되는 **역량**과 **전문성**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과정 편성·운영 및 선발방식을 **수요자 중심**으로 **재설계**

○ **(매뉴얼 정비)** 분야별 업무처리요령, 민원·상담사례집 등 실무에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**매뉴얼·지침**을 **정비**하고 **업무용 내비게이션** 구축

4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제도 운영

○ **(출산·육아)** 자녀와 함께하는 **부모교실**, 배우자와 함께 태교·출산·육아 관련 강좌를 수강하는 **임신부부교실** 등 가족 친화적 복지 프로그램 운영

- 전보 시 **육아공무원**에 대한 **근무지 배려**를 **확대**하고, **다자녀 공무원** 등에 대해서는 연고지 인근 관서에 **장기 근무**할 수 있도록 지원

○ **(건강복지)**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누적된 피로와 업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지친 심신을 재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**건강관리 프로그램** 운영

- 중장년 직원의 **건강검진비용** 및 **난임·불임** 직원의 **치료비**를 지원

2. 현장중심 소통, 청렴역량 강화를 통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

1 조직활력 제고를 위한 현장 중심의 내부소통 활성화

○ **(소통 강화)** 세무서별 **조직문화**를 **진단**하고, 진단결과에 따른 **맞춤형 소통 교육·팀빌딩*** 프로그램을 통해 동료 간의 이해와 공감 증진

* 다양한 환경·배경·동기를 가진 구성원을 이끌어 팀워크를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

- 신규 직원의 빠른 적응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'**새내기 성장 지원 프로그램**'을 마련하고, 선배와의 대화 등 **세대 간 소통** 활동 확대

○ **(업무 개선)** 일선 직원과 함께 업무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**업무혁신 현장회의**, **소통·공감 토론회**를 실시하여 현장 시각의 업무혁신 추진

2 국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

○ **(청렴 제고)** 이해충돌방지법* 시행('22.5월)에 따른 **내부 규정**을 **정비**하고, **청렴도 평가 변경**에 **대비**하는 등 국민 눈높이에 맞춘 방안 지속 추진

* 이해관계자 회피,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등의 의무를 법으로 규정, 위반시 과태료 부과

○ **(문화 확산)** 관리자 대상 **청렴교육 강화***, 시민감사관 등이 참여하는 **청렴협의회**의 내실있는 **운영**으로 청렴문화를 조직 전반에 확산

* 사무관 이상 청렴·소통 관련 교육 이수 의무화로 관리자의 솔선수범 유도

Ⅳ. 2022년,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

국민이 편안한, 보다 나은 국세행정



1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서비스세정 고도화



재설계를 통한 수준 높은 납세서비스 제공

- ✓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성실신고 지원
- ✓ AI 세금비서 시범 도입, 모바일 서비스 지속 확장
- ✓ 납세자보호위원회 권한 및 책임성 강화
- ✓ 소액 고충민원 처리기간 단축



체감형 혁신 성과 창출을 위한 참여와 소통 확대

- ✓ 현장 중심의 소통채널 마련 추진
- ✓ '찾아가는 세법해석 서비스' 새롭게 실시
- ✓ 국민정책참여단(2기) 운영
- ✓ 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 등에 청년위원 적극 위촉



2 경제회복의 온기 확산을 돕는 급부세정 강화



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 뒷받침

- ✓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속 지원
- ✓ 일자리 창출·혁신성장·뉴딜 지원 확대
- ✓ 간편조사 선정 요건 완화
- ✓ 디지털세 도입에 선제 대비



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세정 제공

- ✓ 500만 이상 가구에 차질 없이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
- ✓ 장려금 신청 프로세스 개선으로 더욱 빠른 장려금 지급
- ✓ 국민복지·정책개발 등에서 국세정보 활용도 제고
- ✓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안착



3 공정세정을 통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



고의적 탈세에 대한 엄정 대처로 공평한 세부담 실현

- ✓ 불공정 탈세, 지능적 역외탈세 행위 엄단
- ✓ 생활밀접·거래질서 문란 분야 상시 검증
- ✓ 부동산 거래 관련 탈루행위 검증 강화
- ✓ 신종탈세 분석시스템 개발 등 조사인프라 고도화



정당한 과세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체납·송무 대응

- ✓ 재산은닉 기획분석 강화, 명단공개자 특별정리기간 운영
- ✓ 세무서 추적전담반 도입 등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조사 실시
- ✓ 사례 분석을 통한 소송 유형별 대응방안 제공
- ✓ 쟁점별 사건관리 시스템 마련

4 일하기 좋은, 활력 있는 일터 조성



직무몰입 향상을 위한 일하는 방식·환경 혁신

- ✓ 수동·반복 업무 자동화
- ✓ 공정한 인사시스템 운영
- ✓ 실무 중심의 체계적 교육 시스템 마련
- ✓ 가족 친화적 인사 · 복지 제도 운영



소통, 청렴역량 강화로 건강한 조직문화 확립

- ✓ 맞춤형 팀빌딩, 세대간 소통 확대
- ✓ 업무혁신 현장회의, 소통 · 공감토론회 개최
- ✓ 국민 눈높이에 맞춘 청렴 제고
- ✓ 청렴교육 강화, 내실있는 청렴 협의회 운영

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